

북한 우표를 통한 민족에서 국가로의 담론 전환 분석

이양우*

본 연구는 북한 우표에 나타난 시각적 상징 변화를 분석하여, 정체성 담론이 '민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다. 기존 연구가 연설문 및 문헌 분석에 집중해 온 것과 달리, 우표라는 일상적·반복적 선전 매체에 주목하여 북한의 기억정치, 이데올로기 재구성, 국가 정체성 형성의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틀은 라스웰의 선전 이론인 "정치적 목적성, 상징체계, 반복성, 대상 지향성"을 기반으로 한 3축 분석모형 "담론 방향성, 상징체계, 외생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기 우표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결과, 김일성은 '하나의 민족·하나의 조국'이라는 통일 민족주의 서사를, 김정일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유지·확장하는 방향을 시각화 하였다. 반면 김정은은, 특히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서는 '민족', '통일'의 상징이 급격히 축소되며, 핵무력·전략무기·국가제일주의 등 국가·안보 중심 서사가 선전의 핵심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동질적 민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는 우표가 정책 문건보다 빠르게 담론 변화를 반영하는 선전·정체성 변화의 "조기 지표(early indicator)"임을 보여준다. 우표라는 시각 매체 분석을 통해 북한의 민족 담론 약화와 국가 중심 서사 부상을 구조적·전략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였으며, 북한 선전 연구 및 한반도 정체성 연구에 새로운 분석 관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북한 우표, 상징 정치, 민족 담론, 두 국가론, 북·미 관계

* 연세대학교 국제학 석사.

1. 서론

2023년 12월 31일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한과 북한을 더 이상 ‘동족,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선언하였다. 나아가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문건에서 ‘통일’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남·북이 더 이상 ‘하나의 국가, 동질적 민족’이 아닌 것으로 재정의하며, 민족 담론을 약화하고 국가 담론을 강화하였다. 또한 해당 언급에 앞서 이 방식은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들과의 ‘대결’ 및 ‘투쟁’임을 강조하고 “남조선은 양키(미국)에 국방과 안보를 식민지·속국처럼 의존하고 있는 반신불수의 기형적 국가”로 표현하였다.¹⁾ 이와 같은 입장은 단순한 수사의 변화가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고 남북관계를 본질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전략적 시도임을 시사한다. 더하여 북한의 국가 중심으로의 담론 변화는 한반도를 넘어 불편한 미국과의 국제정치 상황에 대하여 대응 및 반응한 언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평양 남부에 위치한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을 “꼴볼건”으로 발언, 북한 헌법에 명기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표현 삭제 그리고 화해와 통일 및 동족 개념이 현실이 아님을 직시하고 ‘국적법 개정’ 등의 조치를 시사하였다.²⁾ 이후 실제로 ‘3대헌장기념탑’ 철거,³⁾ ‘조선우표사, 우리민족끼리’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전원회의,” 조선중앙통신, 2024년 1월 16일.

3) “북한, 평양서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철거”(2024.1.24.), 통일부, <https://>

내 ‘평화통일’ 항목 삭제, ‘국가법’ 재정⁴⁾ 등 상징적 조치를 실행에 옮기며 민족 담론 약화 작업을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표와 같은 선전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노출되며, 정책 변화의 서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우표는 국내 우편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일반 주민에게 이데올로기 주입 도구로 기능하나, 주요 타깃은 해외 수집가로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⁵⁾ 이는 통일 지향적 민족 서사로부터의 급진적 이탈이며, ‘두 국가’라는 새로운 자국 중심의 공식 담론을 통해 남북관계를 본질적으로 적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고, ‘선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법제화하였다.⁶⁾ 이와 같은 조치는 ‘민족 단일성’과 ‘평화통일’이라는 과거의 수사를 넘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표출하고, 무력과 핵전략에 기반한 국가적 서사를 강화함으로써 남·북과 북·미 관계 전반에 구조적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에서 남·북 문제로만 생각하였던 ‘두 국가’ 담론을 바라봄에 있어 시각을 전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각종 ‘조선로동당회의’,

www.unikorea.go.kr/web/unikorea/bbs/bbs_0000000000000006/57544?cp=63&pageSize=15&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bcId=bbs_0000000000000006&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 조선중앙통신, 2024년 10월 24일.

5) Mark Sommer, “Pyongyang, Propaganda, and Postage Stamps,” *North Korean Review*, Vol.13, No.2(2017), pp.74-83.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조선중앙통신, 2023년 9월 2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을 주기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정책 변화에 앞서 2021년 핵 투발 수단인 ‘ICBM 고도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착수와 SLBM 보유’⁷⁾를 공식화 그리고 2023년 정식 ‘핵보유국’으로 공표했다. 즉, 북한 정권의 대남 기조 변화와 대미 항쟁을 위한 전략무기 개발 시점이 일맥상통한 점에서 ‘적대적 두 국가’는 국제관계 속 미국과의 ‘대립’, ‘반발’, ‘협상’의 내면을 내포한다. 북한의 서사 변경에 있어 중요한 점은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북·미 양국의 정상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회담 이후에 정책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제재 전면적 해제’를 두고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미국과 북한 간 입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끝내 협상이 결렬되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점에 이루지 못한 직후 미국에 대한 강경한 언어적 수사는 자제하였다. 하지만 2019년 ‘북미정상 회담’ 결렬 이후부터 북한은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응하여 핵 능력 고도화를 실행하였고,⁸⁾ 2021년 1월 9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하여 통일노선 서사 변화의 조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⁹⁾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과 함께 “강위력한 국방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과 통일의 위업 달성”, “북·미관계는 ‘강대강’과 ‘선대선’ 원칙”을 언급하였다.¹⁰⁾ 다만 북한의 선전·선동물인 우표에서는 이보

7)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조선중앙통신, 2021년 1월 8일.

8) 황수환 외,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서울: 통일연구원, 2024), 28쪽.

9) 권숙도,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통해 본 북한 통일정책의 전환,” 『대한정치학회보』, 제32권 4호(2024), 137쪽.

10)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다 2년 앞선 2019년에 서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점을 통해 북한은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밀접한 영향을 받고 행동함을 확인하였다.

우표는 1836년 영국에서 고안한 제도이며, 롤런드 힐(Rowland Hill)의 연구를 통하여 중요성이 인지되었다.¹¹⁾ 작은 종이 뒷면에 얇게 접착제를 바르는 것을 고안하였고, 최초 우표인 ‘페니 블랙(Penny Black)’의 도안으로 ‘빅토리아 여왕’의 옆모습을 채택하였다. 영국은 현재까지도 국가의 상징을 위해 왕 또는 여왕을 도안으로 채택하고 있다.¹²⁾ 우표의 기능은 국가의 정치·사회적 현상과 입장을 표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정치의 상징화를 위한 기능임과 동시에 매개체다. 이는 자유주의 또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정부 또는 정권이 추구하는 국가상징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다.¹³⁾ 북한의 경우, 우표는 발행 후 국내 우편과 전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제로 노출되며, 정책 변화의 서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예를 들어, 2019년 이후 핵 테마 우표 증가가 주민 이데올로기 교육에 활용되었다.¹⁴⁾ 또한 크기가 작고 일상적이지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고밀도 선전물로, 내부의 국민 또는 주민뿐 아니라 국가 외부 수신자에게도 전략적 메시지

11) Douglas N. Muir, *Postal Reform & the Penny Black*(London: National Postal Museum, 1990), p. 42.

12) Simon Garfield, *The Error World: An Affair with Stamps*(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09), p. 118.

13) 이혜숙, “우표로 본 한국사회와 상징정치: 해방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20권(2018), 75쪽.

14) David Hall, “North Korean National Identity, Expressed Through Postage Stamps, 1948-1970,” *The Journal of Korean Philately*(Korea Stamp Society, 2018).

를 전달하는 도구로 기능한다.¹⁵⁾ 특히 정치체제의 이념과 정체성이 시각적 기호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우표를 단순한 통신적 수단이 아닌, 국가의 상징 정치에 핵심 매체 중 하나로 간주하여 분석한다.¹⁶⁾

즉, 북한 우표에 나타난 변화가 담론의 구조적 전환을 반영한다고 보고, 세 가지 분석 틀을 설정한다. 첫째, ‘담론 방향성’ 차원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기를 관통하는 ‘민족 중심 → 국가 중심 → 두 국가’로의 이동을 분석한다. 둘째, ‘상징체계’ 차원에서 도상에 나타나는 통일·민족의 축소와 국가·군사의 확대를 비교한다. 셋째, ‘외생적 요인’ 차원에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등 국제정치적 스트레스가 북한의 상징 정치와 담론 전환을 촉발한 요인을 검토한다. 이 세 가지를 결합하여 북한 우표의 시각적 서사가 민족에서 국가로 이동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김일성 시기의 ‘통일 민족주의’, 김정일 시기의 ‘민족 담론 유지와 군사 상징 병행’, 김정은 시기의 ‘국가·안보 담론의 전면화’라는 연속적 구조 속에서 우표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 담론이 민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명한다.

북한 정권 담론의 전환은 ‘우표’라는 시각 상징물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북한 우표는 김일성 시대 이래 ‘민족주의’, ‘수령숭배’, ‘통일지향’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시각화해 온 국가 선전 도구였

15) Henio Hoyo, "Posting Nationalism: Postage Stamps as Carriers of Nationalist Messages," in Joan Burbick and William Glass(eds.), *Beyond Imagined Uniqueness: Nationalisms in contemporary perspectives*(Cambridg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0), pp.67~68.

16) Phil Deans and Hugo Dobson, "Introduction: East Asian Postage Stamps as Socio-Political Artefacts,"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Vol.22, Issue.2(2005), pp.3~7.

다.¹⁷⁾ 그러나 2020년 이후 조선우표사 내 ‘민족’과 ‘통일’ 관련 키워드는 사라지고 ‘핵전력’, ‘전략무기’ 등의 무력 수단 상징체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우표는 국가의 전략적 이념과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상징 정치의 매체임을 방증한다. 북한 우표는 국내적으로는 일반 주민과 당 엘리트이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수집가로, 이는 우표가 정책 변화의 실제 서사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매체임을 방증한다.¹⁸⁾ 북한은 체제 위기 또는 외교적 고립 상황에서 우표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한다. 즉, 분석을 통해 정권의 서사 전환과 전략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조망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우편총국(우정국)은 1946년 3월에 공식적으로 창설되어, 해방 이후 새로 조직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산하의 행정기구 중 하나였다.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독립 기구로서 ‘조선우표사(Korea Stamp Corporation)’¹⁹⁾라는 전문 기관이 발족되었고, 기획과 디자인 그리고 해외 전시 및 판매까지 전담하고 있다. 조선우표사 사이트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발행한 우표들을 망라해 놓았다. 2025년 기준 대략 7,497매의 우표를 발행하였으며, 카테고리에 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정치’, ‘군사’, ‘정책’, ‘국기’, ‘국장’, ‘기념일’, ‘사상 교양’, ‘선전화’, ‘인물’, ‘조

17) 정다현, “북미·남북관계 북한우표의 함의와 상징주의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24권 3호(2021), 110~112쪽.

18) David Hall, “Postage propaganda: The pro-Soviet stamps North Korea wants the world to forget,” *NK News*, August 15, 2025, <https://www.nknews.org/2025/08/postage-propaganda-the-pro-soviet-stamps-north-korea-wants-the-world-to-forget/>(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우표사,” <http://www.korstamp.com.kp/>(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국 통일’ 등으로 주제가 분류된다. 논문에서는 민족과 통일의 변화와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조국 통일’ 주제를 선택하여 분석한다. 다만 2023년 해당 카테고리는 삭제되었으며, 사라진 ‘조국 통일’은 우표수집 사이트인 ‘스탬프 월드’²⁰⁾와 비교·분석을 병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전 연구의 고전적 틀인 라스웰(Lasswell, 1927)의 ‘선전의 네 요소’를 북한 우표 분석에 직접 적용한다. 즉, “정치적 목적성, 상징적 압축성, 반복적 노출, 대상 지향성”은 우표라는 매체의 특성과 정확하게 대응한다. 북한 우표는 첫째, 국가 정체성·핵무력·대남·대미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조직하여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는 정치적 목적성을 지닌다. 둘째, 민족·통일·핵미사일 등 단순하지만 강력한 시각 문구로 복잡한 담론을 요약하는 상징적 압축성을 갖는다. 셋째, 국내 우편 사용과 지속적 발행을 통해 주민에게 노출되는 반복성을 지닌다. 넷째, 우표는 내부 집단뿐 아니라 수집가 및 국제정치까지 이중적 목표성을 갖고 있어, 북한 선전의 대내외 전략을 동시에 반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네 요소는 북한 우표의 구조적 기능 설명에 여전히 유효하며, 분석 틀 형성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전 이론에 기반하여 북한 우표에 나타난 민족·통일 담론의 약화와 국가·안보 담론의 부상을 분석하기 위한 3축 분석 틀을 제시한다. 첫째, ‘담론 방향성’으로 김일성·김정일 시기의 ‘민족 중심·통일 지향’ 서사가 김정은 시기 ‘국가 중심·핵무력·두 국가’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둘째, ‘상징체계 변화’로는 우표의 도상·문구 변화에 주목하여 ‘통일·민족’ 상징의 축소와 핵·미사일

20) “Stamp World,” <https://www.stampworld.com/ko/stamps/North-Korea/> (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등 국가·군사 상징의 확대를 비교한다. 셋째, ‘외생적 요인’으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강화된 미국의 확장억제와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 담론 및 상징 변화의 핵심 동인임을 검토한다. 이 세 축은 상호 연동되어 있으며, 우표는 이러한 담론 변화가 공식 문건보다 앞서 나타나는 ‘조기 지표(early indicator)’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분석적 의의를 내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 시기를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민족 담론 약화와 국가 중심 담론 강화가 단순한 대남 수사가 아니라 국제정치적 압박에 대한 구조적·전략적 대응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적대적 두 국가론과 민족 담론

북한 민족주의는 체제 정당화와 내부 결속을 위한 핵심 이데올로기로 기능해 왔다. 김일성 시대의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체제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국가 담론의 핵심이었으며, 김정일 시기에도 민족 단일성과 통일지향이 북한 정체성 서사의 중심을 이루었다.²¹⁾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민족주의는 점차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민족 공동체 담론보다 국가 중심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²²⁾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언어적 조정이

21)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2021), 139쪽.

22) 황수환 외,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28쪽.

아니라, 대외적 압박과 정권 생존 전략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따라 민족 담론의 위상을 재편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핵 능력 고도화 이후 북한은 민족 개념을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며, 민족주의를 국가주의로 재구성하는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심화하고 있다.

2023년 12월 31일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두 국가’ 주장을 공식화하면서 동질적 민족으로 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했다.²³⁾ 이 담론은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들은 이를 ‘한민족 부정론’으로 규정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황수환 외(2024)는 북한의 ‘두 국가론’이 민족 단일성을 부정하는 전략으로, 이를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한다고 분석하며, 남한의 경제 격차 확대와 국제 위상 저하를 배경으로 한 내부 동요 억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두 국가론’이 “남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동독 사례와 유사하게 체제 경쟁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며, 남한의 대응으로 민족 개념 재설정을 제안한다.²⁴⁾

이와 유사하게 권숙도(2024)는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통해 북한 통일정책의 전환을 설명하며, 민족주의에서 국가주의로의 이동을 강조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무효화와 통일 기반 약화를 통해 남북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전환을 “남북관계 역사에 대한 북한의 평가”로 보며, 민족 개념 무의미화가 통일 본질을 약화한다고 지적한다.²⁵⁾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보민(2021)은 북한 민족주의의 역사적

23) 권숙도,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통해 본 북한 통일정책의 전환,” 127쪽.

24) 황수환 외,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28쪽.

25) 권숙도,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통해 본 북한 통일정책의 전환,” 127~137쪽.

변화를 추적하며, 김정은 시대에서 ‘국가제일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을 지적하고, 우리 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의 전환을 체제 유지 전략으로 해석하였다. 더하여 담론 분화를 2004년부터 분석하며, 통일 지향 담론이 약화된 원인을 남북관계 변화로 본다.²⁶⁾

표윤신·허재영(2022)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저항 민족주의’의 계승으로 해석하며, 핵무력 완성 이후 북한의 민족주의가 대외 위협에 대한 체제 결속으로 발전했다고 분석하고, 주체사상과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연장선에서 이를 설명하였다. 이들은 핵 담론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국가제일주의가 민족주의의 발전형이라고 주장한다.²⁷⁾ 나아가 정대진(2024)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남한의 대응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유용성을 재검토하며 평화적 두 국가 상태를 제안하고, 다양한 통일국가 형태(연합·연방)를 통한 개인 자유 확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분단에서 분할로의 전환을 지적하며, 통일 논의 활성화를 위한 상상력 필요성을 강조한다.²⁸⁾

손선홍(2025)은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선언을 동독의 ‘두 민족 두 국가론’과 비교하며, 체제 경쟁 실패와 국제 위상 저하를 배경으로 분석하고, 남한과의 관계 차단을 통한 정체성 강화 조치로 규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선언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별개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해석하며, 대응으로 사회적 공론장 확대를 제안한다.²⁹⁾ 이봉기(2025)는 동독의 2민족론과 사회주의 독일민족 담론을 분

26)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139쪽.

27) 표윤신·허재영, “‘저항 민족주의’의 계승과 발전: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문화와 정치』, 제9권 4호(2022), 37쪽.

28) 정대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통일방안,” 『통일과 평화』, 제16집 2호(2024), 127쪽.

석하며, 북한의 2민족론 주장 배경을 동독 사례와 비교하고, 실패 유산이 통일 후 통합 장애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남한의 대응으로 통일 원칙과 평화공존 점점(병렬·병존·공존·통합)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³⁰⁾

그러나 최근 북한의 민족 상징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국가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한민족 부정론’³¹⁾과 ‘적대적 두 국가’³²⁾ 개념으로 논의되며, 북한이 민족 단일성보다는 국가 중심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논의를 바탕으로, 우표라는 시각적 매체에 나타난 민족 상징 약화의 실증적 패턴을 분석하고, 특히 정책 문건보다 앞서 나타난 2020년 전후의 변화가 북·미 관계라는 외생적 요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규명한다.

2) 우표의 상징 정치와 시각 선전

북한의 담론 변화는 단순한 언어적 조정이 아니라 정권 생존 전략과 맞물린 상징정치의 재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전 연구의 고전적 이론가인 라스웰(Lasswell, 1927)은 선전을 “특정 태도와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상징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정치 선전이 체제 정당화라는 정치적 목적성, 시각·언어 기호를 통한 상징체계, 반복적 노출, 내부·외

29) 손선흥,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선언과 우리의 대응: 동독의 ‘두 민족 두 국가론’과 비교,” 『외교』, 제152호(2025), 172쪽.

30) 이봉기, “동독의 2민족론과 사회주의 독일민족 담론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과제,” 『현대북한연구』, 제28권 1호(2025), 127쪽.

31) 황수환 외,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28쪽.

32) 권숙도,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통해 본 북한 통일정책의 전환,” 137쪽.

부 대상을 향한 메시지 지향성 등을 통해 작동한다고 설명한다.³³⁾ 이러한 관점에서 우표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주민과 외부 수집가를 동시에 겨냥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라스웰이 제시한 선전의 구조적 요건을 충족하는 상징 매개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시기 민족주의 담론의 변화 역시 이러한 선전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대외 제재와 북·미 갈등 심화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민족주의를 ‘통일지향’ 담론에서 ‘국가제일주의’와 핵무력 정당화 담론으로 재구성해 왔다. 라스웰의 관점에서 이는 외부 위협을 “태도 관리(attitude management)”를 통해 통제하려는 시도로, 민족 담론을 저항 담론이자 체제 결속 장치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재편은 담론 차원뿐 아니라 우표와 같은 시각 선전 매체에서 구체적 상징으로 구현된다. 프리에토안드레스 등(Antonio Prieto-Andrés et al., 2023)은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식민지 우표를 분석하며 우표가 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피지배 민족을 타자화하는 선전 도구로 기능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우표가 국가 이데올로기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치적 장치라는 점에서 북한 사례와 유의미한 비교 틀을 제공한다.³⁴⁾

기존 연구들은 북한을 포함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족주의와 국가 담론이 선전 기제를 통해 재구성된다는 점을 잘 포착하고 있으나, 그 담론이 우표와 같은 시각 매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라스웰의 선전 이론을 직접

33) Harold D. Lasswell, “The Theory of Political Propagand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21, No.3(1927), pp.627~631.

34) Antonio Prieto-Andrés et al., “The propaganda of Italian colonial imperialism in Africa through postage stamps (1903-1941),” *Nations and Nationalism*, Vol.29, Issue.4(2023), p.1401.

적용하여 우표의 이미지·문구·주제 구성 등이 어떠한 태도 형성을 유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체성을 재편하는지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기존 연구가 당 문건·연설문 등 텍스트 중심 자료에 의존해 왔다면, 본 연구는 우표라는 일상적 선전 매체의 상징 변화를 통해 민족 담론의 약화와 국가·안보 담론의 부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두 국가론’과 민족 담론의 약화는 단순한 이념 부정이 아니라 상징 조작을 통해 민족주의를 국가주의로 재구성하는 전략적 선전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우표 분석을 통해 시각적·경험적으로 입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민족주의 변화는 우표와 같은 상징 정치 매체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표는 국가의 이념과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도구로, 북한에서 ‘민족주의’와 ‘통일지향’을 선전하는 역할을 해 왔다. 정다현(2021)은 북한 우표를 통해 북미·남북 관계의 함의를 분석하며, 우표가 상징주의적으로 민족 통일을 강조한다고 지적하고, 미란다(권력찬미)와 크레덴다(권력신뢰) 상징 조작을 통해 대북·대미 대결에서 북한의 승리를 강조하였다.³⁵⁾ 호요(Hoyo, 2010)는 우표를 ‘국민주의 메시지 전달자’로 규정하며, 권위주의 체제에서 반복 노출되는 고밀도 선전물로 기능한다고 설명하고, 나치 독일 우표 사례를 통해 상징이 태도 형성을 어떻게 유발하는지 분석하였다.³⁶⁾ 딘스와 돕슨(Deans and Dobson, 2005)은 동아시아 우표를 ‘사회정치적 인공물’로 간주하며, 이념과 정체성이 시각 기호로 구현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우표가 국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임을 강조하였다.³⁷⁾

35) 정다현, “북미·남북관계 북한우표의 함의와 상징주의 분석,” 109~110쪽.

36) Henio Hoyo, “Posting Nationalism: Postage Stamps as Carriers of Nationalist Messages,” pp.67~68.

이혜숙(2018)은 우표로 본 한국 사회를 상징 정치 관점에서 분석하며, 해방부터 한국전쟁 시기 우표가 국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통합을 유도했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초기 우표가 남한과 공통 상징(태극기·무궁화)을 공유했다가 분단 과정에서 차별화된 점을 지적하였다.³⁸⁾ 정다현(2024)은 북한의 아지프로 우표정책과 지도자 상징 조작 연구에서 우표를 선전선동 플랫폼으로 분석하며, 김정은 시대 우표가 지도자 이미지를 통해 민족주의를 국가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³⁹⁾ 레베드와 모굴레브(Lebed and Morgulev, 2024)는 소련과 러시아 우표를 통해 스포츠·군사·국가 정체성 선전을 분석하며, 냉전(Cold War) 시기 소련 우표 패턴과 푸틴 시대 군사 우표 증가를 통해 권위주의 선전 트렌드를 밝히고, 북한과 유사한 패턴을 시사한다.⁴⁰⁾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우표가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이념을 시각적으로 조직하는 상징 정치 매체임을 보여준다. 특히 라스웰의 선전 이론 “정치적 목적성, 상징 조작, 반복성, 대상 지향성”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우표가 대중의 태도와 인식을 점진적으로 관리하는 도구로 기능함을 설명하는 데 유효한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북한 우표를 통해 최근의 ‘두 국가’ 담론 전환을 실증적으

37) Phil Deans and Hugo Dobson, “Introduction: East Asian Postage Stamps as Socio-Political Artefacts,” pp.3~7.

38) 이혜숙, “우표로 본 한국사회와 상징정치,” 75~76쪽.

39) 정다현, “북한의 아지프로 우표정책과 지도자 상징조작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109쪽.

40) Felix Lebed and Elia Morgulev, “Stamps Don’t Lie: Sports, Military, and National Identity Postage Stamps As a Mirror of Aggressive Soviet and Russian Propaganda,” *Physical Culture and Sport: Studies and Research*, Vol.105, Issue.1(2024), p.52.

로 분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표의 도상·문구·카테고리 변화를 분석하여, 민족 상징 약화와 국가·핵담론 강화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되는지를 규명한다. 특히 우표 변화가 공식 담론 전환보다 앞서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우표를 복한 담론 재구성의 ‘조기 지표’로 개념화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담론 중심 연구를 시각적·물질적 증거로 확장하여 복한 국가 정체성 변화의 동학을 더욱 정밀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3. 민족·통일의 상징 정치 활용

복한 우표는 정권이 규정하는 민족·통일 서사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대표적 상징정치 매체로, 시대별 이념 변화를 가장 일찍 반영하는 자료다. 조선우표사의 연도별 아카이브는 민족·통일 관련 상징이 각 시기마다 어떻게 구성·강조·조정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본 장은 김일성·김정일 시기를 중심으로 우표에 나타난 민족·통일 상징의 지속과 변화의 양상을 비교한다. 김일성 시기가 ‘하나의 민족·하나의 조국’이라는 통일 지향 서사를 강하게 제시했다면, 김정일 시기는 정치·외교 환경 변화 속에서도 민족·통일 상징을 유지하되 그 의미와 기능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시기 모두 미국과의 관계는 상징 사용의 강도와 배치 방식에 영향을 미친 외생 변수였으며, 이는 우표의 도상·문구에 반영되었다. 본 장은 이러한 시각 자료를 통해 민족·통일 담론의 구조적 연속성과 미세한 변형을 분석한다.

1) 김일성: 민족·통일과 반미·자주의 시각화(1945~1994)

김일성 정권 초기 우표는 민족 통합 서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도상 구성이 두드러진다. 〈그림 1〉 1966년 우표는 “조선은 오직 하나이다!”, “더는 갈라져 살 수 없다!” 문구와 함께 하나의 조선반도 전도를 배경으로, 북측을 상징하는 남성이 남측을 상징하는 여성을 감싸 안는 장면을 묘사한다. 이는 남북 동질성과 북한의 보호자 정체성을 강조하며, 통일을 역사적 과제로 암시한다. 양측이 양팔을 벌리고 다가가는 장면은 분단 민족의 재결합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다. 한국전쟁 후유증 속에서 민족 통합을 강조하고, 미국을 분단 원흉으로 규정하는 초기 패턴을 형성했다. 이러한 구성은 통일을 체제 정당성 기반으로 삼아, 분단 상황을 북한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림 2〉 1969년 우표는 반미 정서를 병치하며, “남북이 힘을 합쳐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자”, “자주통일” 문구와 함께 잉글 샘⁴¹⁾을 군중



〈그림 1〉 1966년



〈그림 2〉 1969년



〈그림 3〉 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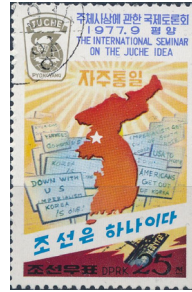
41) Robert Haven Schauffler, *Flag Day: its history* (New York: Moffat, Yard And Company, 1912), p.45.



〈그림 4〉 1973년



〈그림 5〉 1975년



〈그림 6〉 1977년

이 무장해 타격하는 장면을 삽입했다. 〈그림 3〉 1971년 우표는 “미제를 때려부수고 조국을 통일하자” 구호 아래, 무장 군인이 조선반도 전도를 배경으로 서 있고 “통일 = 외세 축출” 서사를 전달한다. 미국은 동학의 핵심 축매로,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 등 북·미 대치 고조 시 반미 테마가 본격 반영되었다. 통일을 단순 민족 감정 호소가 아닌 제국주의 항쟁으로 재구성하며, 자주 노선을 강조했다.

1973년부터 북한 우표는 남북 연방제 구상과 자주통일 담론을 본격 선전했다. 〈그림 4〉 1973년 우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5대 강령” 구호와 함께 ‘단일 국호 연방제’, ‘두 개 조선 반대’ 메시지를 시각화했다. 이는 같은 해 박정희 정부의 ‘평화통일외교정책 특별선언(6·23 선언)’을 ‘두 개 조선 고착화 계략’으로 반박하며, 김일성 고려연방제와 연계된 5대 강령 “유엔 단일 가입, 군사 대치 완화, 교류 확대, 대민족회의”를 강조했다. 해당 우표는 북한을 통일 주체로 시각 정당화했다.

〈그림 5〉 1975년, 〈그림 6〉 1977년 우표는 “조선은 하나이다”, “자주통일”, “양키 이놈!”, “AMERICANS GET OUT OF KOREA” 등 반미 구호를 지속 삽입, 미군 철수를 통일 장애물로 지목했다. 일부 우표는 한반



〈그림 7〉 1978년



〈그림 8〉 1979년



〈그림 9〉 1980년

도 지형에 수도를 나타내는 별을 평양에 표시, 통일 후 북한 중심 국가 구상을 시사했다. 북한은 1975년 미국과 베트남의 종전 이후 긴장 완화 시기에도 반미 테마를 유지하며, 통일을 자주 항쟁으로 연결했다. 이 단계는 연방제 구상을 구체화, 이후 3대 원칙 정착으로 이어졌다.

1978년부터 발행된 북한 우표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을 본격 텍스트로 표기했다. 이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도출된 기초로, 이후 통일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그림 7〉 1978년 우표는 원칙 명시와 함께 ‘민족’,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시켜 연방제 제도화를 시각 선전했다. 또 한 남·북 인물이 손잡는 이미지는 통일·화해 상징으로 반복 활용되었다. 〈그림 8〉 1979년 우표는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문구로 사회주의 국가 운영 원리를 통일 구상 핵심으로 시사했다. 〈그림 9〉 1980년 우표는 한반도 좌측에 낮과 망치 문양 배치로 통일 = 사회주의 이행을 명시했다. 이는 통일을 민족주의 호소가 아닌 체제 재편 기회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1970년대 데탕트로 미국과 소련의 관계 완화 속에서도 반미 테마를 유지하며, 통일을 북한의 자주 항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그림 10〉 1981년



〈그림 11〉 1983년-1



〈그림 12〉 1983년-2

〈그림 10〉 1981년부터 발행된 북한 우표에서는 통일 담론의 핵심 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이 본격적으로 텍스트로 표기되기 시작한다. 이는 이전 시기의 상징적 구호 중심 표현에서 보다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이념 서술로 전환된 사례로 해석된다. 이 시기 우표에서 주목할 점은 ‘민족’,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는 점이며, 이는 북한이 제안한 통일 방식의 제도화를 시각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념적 텍스트와 함께, 시각적으로는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남·북 인물의 이미지가 삽입되어 통일과 화해의 상징을 부각시킨다. 이는 민족 내부의 동질성과 협력을 표현하는 전형적 수사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활용된다.

〈그림 11〉 1983년-1 우표에는 “USA” 문구가 새겨진 미사일과 전차를 거부하는 손의 형상을 배치함으로써, 외세 배격과 자주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이 같은 표현은 단지 반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자주적 통일이 외세 배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북한의 정치적 전제를 우표라는 상징 공간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1981~1983년 우표에는 공통적으로 통일된 한반도 지도 위에 수도를

상징하는 별을 평양에 표기하여, 통일 국가의 중심이 북한임을 시사하는 시각적 전략이 뚜렷해진다. 이러한 일련의 우표는 북한이 단일 민족 공동체라는 기존의 통일 내러티브를 정제된 이념 언어와 정교한 시각 코드로 체계화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으며, 통일의 주체성 경쟁에서 상징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각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변수는 1981년 레이건 행정부 출범과 소련과의 냉전 재점화로 3대 원칙을 반미 자주 노선으로 강화했다. 이 단계는 통일 담론을 이념 언어로 체계화하며, 민족제일주의 대두로 이어졌다.

김정일은 1986년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창하였으며, 1989년과 1992년 담화를 통해 이 담론을 북한 민족주의의 핵심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우표에서도 이념과 일치하는 상징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선전물과 정치 담론 간의 밀접한 연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1988년 우표에서는 “민족대단결”이 명시적으로 사용되며 기존 통일 담론의 기초를 계승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조국통일 5대 방침”, “조국통일 3대 원칙” 문구가 동시에 삽입되어 북한이 제시한 통일 구상의 주요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표상된다. 통일된 한반도 형상 위에 인공기가 삽입되어 있으며 수도로서 평양의 상징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통일 이후 북한 주도의 국가 구상을 시각화하고 있다.

〈그림 14〉 1989년 우표에는 군중들이 “우리의 조국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장면이 묘사된다. 이는 민족 단결을 향한 집단적 열망을 시각으로 재현한 사례로 통일 담론의 집체적 정당성을 강조한다. 〈그림 15〉 1990년, 〈그림 16〉 1992년 우표에서도 “통일”, “민족”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1993년까지 통일된 한반도 지형이 주요 도상으로 활용된다. 우



〈그림 13〉 1988년



〈그림 14〉 1989년



〈그림 15〉 1990년



〈그림 16〉 1992년



〈그림 17〉 1993년

표는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민족적 연대감, 자주적 통일, 북한 주도가 일관되게 구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미국 변수는 소련 붕괴(1991) 후 체제 강화로 민족제일주의를 자력갱생으로 재구성하며 우표를 통해 체제 결속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진화는 김정일 시대 우표의 민족 통일 서사를 체계화하며 김정일 시대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준비하였다.

2) 김정일: 민족·통일 담론의 지속과 재배열(1995~2011)

김정일 시기는 ‘선군정치’가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부상했지만,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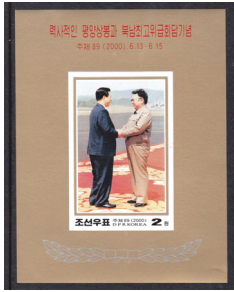


〈그림 18〉 1997년

〈그림 19〉 1999년

표에서는 김일성 시기의 민족·통일 담론이 여전히 중심축을 이루었다. 다만 이 담론은 변화한 대외환경 — 특히 미국과의 핵 협상과 갈등 — 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조정되며 점차 자강·체제 보호의 맥락을 배열한다. 김정일은 노동당 총비서 추대 이후에도 ‘3대 통일원칙’(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계속 강조했고, 〈그림 18〉 1997년, 〈그림 19〉 1999년 우표에 반복되는 표어는 민족·통일 담론이 여전히 중요한 정체성 자원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이후 핵 문제가 재부상하고 미국의 대북 불신이 심화된 1990년대 후반의 환경은 우표 메시지를 점차 경계적이고 자강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김정일 시기 우표는 민족·통일 상징을 계승하면서도, 대미 갈등 속에서 그 의미를 재배열하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인다. 본 절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김정일 시대가 민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전환기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2000년은 민족 상징의 분명한 전환점이었다.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에 맞춰 북한은 이를 우표를 통해 적극 시각화하며 통일 담론의 새로운 국면을 부각했다. 〈그림 20〉



〈그림 20〉 2000년



〈그림 21〉 2003년



〈그림 22〉 2005년-1



〈그림 23〉 2005년-2



〈그림 24〉 2007년

2000년 우표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기념” 문구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악수 장면을 담아 협력·화해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이는 당시 부시 행정부 출범 전후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북한이 ‘민족·통일’ 서사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어 〈그림 21〉 2003년 우표에는 황진영 작사·작곡의 ‘우리는 하나’ 가사가 인쇄되어 “하나 민족도 하나, 하나 피줄도 하나…”와 같은 문구로 동일 민족성과 통일 염원을 반복 강화한다. 특히 매 절 마지막의 “태양조선 우리는 하나”는 통일의 주체를 북한 체제로 귀속시키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한다.

〈그림 22〉 2005년-1과 〈그림 23〉 2005년-2의 6·15 공동선언에서

는 통일 한반도 지형, “우리 민족끼리” 문구, 남북 정상의 친밀한 이미지, 경의선 철도 등을 결합하여 화해·연결의 상징성을 극대화하였다. 지도에는 평양을 수도로 표시한 북한식 행정구역 체계(자강도·양강도·나선특별시 포함)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통일 후 정치적 주도권을 자신들에게 위치시키려는 상징적 재구성이다. 나아가 〈그림 24〉 2007년 우표는 “북남수뇌상봉 기념” 문구와 함께 무지개·비둘기·통일 한반도 지도를 배치해 ‘평화·통일·친선’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2000년대 남북 관계 완화 국면 속에서 북한이 통일 담론의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북한 중심으로 고착시키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기 우표들은 남북 화해 국면 속에서도, 민족 담론의 해석 권한을 북한이 선점하려는 선전전략이 일관되게 작동했음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우표들은 김정일 집권기의 후반기를 대표하며, 기존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강조해 온 이념들을 종합적으로 시각화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25〉 2008년-1 우표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자!”는 구호와 함께, 통일된 한반도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있는 백의의 인물이 등장한다. 배경에는 무지개와 비둘기라는 전형적인 평화 상징이 배치되어 있으며, 등장인물들은 각각 다른 상징을 체현한다. 왼쪽 인물은 통일된 한반도가 인쇄된 상의를 착용하고 있으며, 중앙 인물은 붉은 넥타이를 통해 노동당 중심의 사회주의 이념을 나타낸다. 오른쪽 여성은 “조선은 하나다”라는 문구를 몸에 부착한 플래카드를 통해 민족적 통합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같은 해에 발행된 〈그림 26〉 2008년-2의 또 다른 우표에는 한반도 전역을 배경으로 “자주통일, 평화통일”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과 두 인물의 악수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악수 위에는 보호하



〈그림 25〉 2008년-1



〈그림 26〉 2008년-2



〈그림 27〉 2009년



〈그림 28〉 2010년



〈그림 29〉 2011년

듯 손을 얹은 제3자의 팔이 등장하는데, 이는 김정일의 권위를 상징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소매의 색상이 김정일이 공적으로 자주 착용하던 의복의 색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을 강화한다. 더하여 두 손 중 검은색 소매는 한국의 지도자를 표현하고, 흰색 소매는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를 더하였다. 이 장면 위에도 비둘기가 등장하며, 평화 담론의 반복적 시각화를 보여준다.

〈그림 27〉 2009년 우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문구와 함께 ‘N(nuclear)’을 파괴하는 이미지를 삽입하고, “자주, 평화, 친선” 표어를 한반도 전도와 결합하여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주체임을 강조한다. 〈그림 28〉 2010년 우표의 “6·15공동선언”, “우리민족

끼리”, 〈그림 29〉 2011년 우표의 “북남공동선언”, “비핵화”, “북침전쟁 연습 반대” 등은 모두 민족 단합과 평화적 통일을 반복적으로 호명하며, 김정일 시기 민족·통일 상징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 기호들은 2009년 2차 핵실험과 국제 제재 심화 등 대외 환경변화 속에서도, 북한이 ‘민족 단합을 통한 평화적 통일’의 정당성을 유지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즉, 김정일 시기 우표는 민족·통일 상징을 중심에 두되, 비핵화·평화·반전 메시지를 병행함으로써 변화한 대외 조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통일 담론의 표현을 조정하였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의 우표는 김일성 시기에서 이어지는 민족 중심 통일 서사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압력 속에서 그 의미를 재배열한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2011년 김정일 사망까지 지속되며, 다음 장에서 분석할 김정은 시대의 급격한 상징 전환(민족 → 국가·핵 중심)과 대비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4. 민족에서 국가로의 상징 전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은 북한의 민족 통일 담론에 결정적 전환점을 만들었다. 그 이후 우표에서 ‘조국통일’ 카테고리 삭제되고, 군사적 상징이 대두되며, 민족주의는 국가주의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본 장은 회담 결렬 이후 우표 도상 변화를 중심으로, 민족 통일 상징이 어떻게 약화하고, 미국 변수가 북한을 국가주의적 재구성으로 이끌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2020년 이후 등장한 포스터형·무기 중심 우표는, ‘적대적 두 국가’ 담론의 시각적 구현물로서 체제 생존 전략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미국은 핵심 변수

로, 하노이 결렬이 북한의 대미 보복과 강경 태세를 유발하며, ICBM·SLBM 등 미국을 겨냥한 무기 이미지를 우표에 본격 도입했다. 이는 통일 담론의 약화를 가속화하며, 북한의 상징 정치가 민족에서 국가·무력 중심으로 전환된 과정을 드러낸다.

1) 김정은: 민족 담론의 침묵적 계승(2012~2019)

김정은 정권의 초기 우표 발행 양상은 민족주의 담론과 통일 정책 기조를 일정 부분 계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림 30〉 2012년 우표에는 김일성 시기의 상징적 구호인 “조국통일 3대 원칙 천명”과 함께, 김정일 정권이 강조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메시지가 동시에 등장하였다. 이는 김정은이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선대의 정책 유산과 민족주의적 상징을 전략적으로 재활용했음을 시사한다. 권력 승계 초기의 내부·외부 인식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계승적 시각 상징은 체제의 연속성과 정권의 안정성을 동시에 담보하려는 시도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그림 31〉 2013년 우표에서도 확인된다. “북과 남사민의 대결선과 해소



〈그림 30〉 2012년



〈그림 31〉 2013년

남 사이의 대결상태 해소”,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 “6·15공동선언, 10·4선언 리행” 등의 메시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통일된 한반도 지형, 비둘기 이미지 등의 평화적 상징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초기 국정 운영에서 비교적 온건한 대남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선대의 유산을 적극 계승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승적 메시지는 단순한 레토릭의 반복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가 민족주의의 약화로 나아가기 전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미국 변수는 제재 강화 속 2012년 12월 은하 3호 발사,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으로 자위력을 반영하나 국제적 압박 속에서도 민족 담론을 체제 안정 도구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2012년에 이어 2015~2016년 우표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선대의 민족주의·통일 담론을 계승하려는 흔적이 뚜렷하다. 평양 대동강변 조국통일 3대현장 기념탑이 공통 배경으로 등장하며, 2001년 준공 상징물이었으나 2024년 1월 19~23일 철거로 민족주의 서사 종결을 상징한다. 〈그림 32〉 2015년-1 우표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 구호와 남한(검은 소매)·북한(갈색 소매) 악수 이미지로 정상 합의 연속성과 통일을 강조한다.

〈그림 33〉 2015년-2 우표도 “6·15 공동선언”,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문구 반복으로 김정일 시대 메시지 계승과 민족연대·통일 이념을 시각 재현한다. 2016년 우표는 이를 종합 강화한다. 〈그림 34〉 2016년 우표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조국통일 3대 원칙,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민족자주·민족대단결·평화보장·연방제·북남관계 개선” 표현과 노동당기 배경 김정은 성명



〈그림 32〉 2015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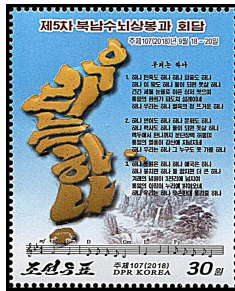
〈그림 33〉 2015년-2



〈그림 34〉 2016년

문(“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입니다”) 삽입으로 선대 유산 계승·정치적 정당성 정착을 시사한다. 2012~2016년 우표는 김일성·김정일 민족주의·통일담론 계승으로 정치적 안정성·정통성 확보에 집중하였다.

2018년 우표들은 김정은 정권이 통일 담론과 민족주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자신에게 이양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5〉 2018년-1 우표에는 노래 “우리는 하나”의 가사가 다시 등장한다. 그러나 세 절 말미 핵심 문구 “하나 우리는 하나, 태양조선 우리는 하나”가 “혈육의 정 뜨거운 하나”, “그 누구도 못 가를 하나”, “후손만대 물려줄 하나”로 개사되었다. 기존에 ‘태양조선’은 체제를 상징하는 핵심 어휘로 통일의 상징적 주체가 김정일임을 드러내는 구절이었다. 이에 반해 개사된 가사는 민족적 연대, 정서적 공감,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라는 보편적 어휘로 대



〈그림 35〉 2018년-1



〈그림 36〉 2018년-2



〈그림 37〉 2019년

체되며 김정일의 흔적을 전략적으로 제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민족주의 서사의 상징적 주체를 선대에서 자신으로 이 전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6〉 2018년-2 우표에서는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주체107년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족의 화해단합, 평화번영” 등의 문구가 삽입되었으며 배경에는 하얀 바탕 위 푸른색 한반도라는 전형적 통일 상징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2018년은 “제4차 북남수뇌상봉”, “제5차 북남수뇌상봉” 등 김정은의 업적을 강조하는 문구가 반복되며 통일의 주체성을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양하려는 전략적 기획이 시각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해당 시기는 남북관계 개선 국면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 간 다섯 차례 정상회담이 이뤄진 시기이다.

〈그림 37〉 2019년 우표에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자!”는 문장들이 등장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와의 연속적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남북 합의 사항을 적극 수용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시각적으로도 통일된 한반도 지도, 무지개, 비둘기, “자주·평화·친선”의 플래카드 등이 우표에 삽입되어 전통적인 민족주의 상징이 지속적으로 동원된다.

해당 우표에는金正은의 신년사 일부 “북남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가 삽입되어 있다. 이는金正은이 단순한 계승자의 위치를 넘어서 통일의 주도적 추진자이자 민족 담론의 중심인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정치적 기획을 시각적 선전물로 구체화하였다. 미국 변수는 2018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 협상 시도로 우표에 잠시 반영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직전까지 온건한 민족 통일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2) 김정은: 두 국가 담론의 부상(2020~2024)

김정은 시기 우표는 민족·통일 중심에서 벗어나 군사·국가 중심 이미지가 급격히 확대되는 전환점을 보여준다. 이 시기부터 ‘조국통일’, ‘우리민족끼리’ 등 이전 시기에서 반복되던 민족 관련 표어가 사라지고, 그 대신 전략무기·군사 장비가 핵심 주제로 부각된다. 특히 〈그림 38〉 2020년 우표는 “조선의 존엄과 힘을 우주만리에 떠올린 대륙간탄도로켓”이라는 문구와 함께 ICBM 이미지를 전면 배치하며 이러한



〈그림 38〉 2020년



〈그림 39〉 2021년-1



〈그림 40〉 2021년-2

변화의 시작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후에도 SLBM, 대구경 MLRS 등 주요 무기체계가 지속적으로 재현되며, ‘전략적 자위권’과 ‘국가의 힘’이 김정은 시기 우표 선전의 중심 메시지로 자리 잡는다. 요컨대 김정은 시기 우표는 민족·통일 서사 약화와 군사·국가 중심 서사 강화라는 상징 정치적 재편을 실증적으로 드러내며, 이는 다음 절에서 다룰 ‘적대적 두 국가’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변화이다.

〈그림 39〉 2021년-1 우표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자주”, “통일”, “친선” 등의 표현이 유지되었으나, 과거 일관되게 병기되던 “평화”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특히 해당 우표의 텍스트에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대외관계 발전을 위하여”,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 등의 문장이 삽입되어 있으나, 이는 과거에 화합과 일체감을 강조하

는 서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남측에 대한 일방적 압박 혹은 조건부 복귀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기존 김정은 성명문에 반드시 포함되던 서명이 삭제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지점이다. 〈그림 40〉 2021년-2 우표에서는 이 변화가 더욱 구체화된다. 상단에는 “우리국가제일주의 일심단결”이라는 구호와 함께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구현”이라는 문구가 삽입되며, 민족의 범주를 ‘국가’와 ‘인민’으로 대체하려는 이념적 전환이 드러난다. 하단 우표에는 “조선로동당식 전략무기 탄생”, “인민군대 최정예화·강군화”와 함께 무기 이미지가 삽입되었다.

이는 당 제7차 대회 결정의 성과를 과시하는 정치적 맥락 속에 배치되어 있다. 특히 우표 좌측 성명문에서는 “조선로동당 신전략무기의 탄생은 역사적 기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이 민족 아닌 무력과 기술 우위에서 비롯됨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라는 표어들이 전체 배경에 삽입되며, 기존의 ‘민족 공동체’ 개념이 ‘국가 중심 체제 담론’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와 같은 시각적·언어적 구성 변화는 단순한 선전 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의 정체성 서사에서 ‘민족’을 약화하고, 대체 담론으로서 ‘국가제일주의’ 이념을 제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변수는 하노이 결렬 후 ICBM·SLBM 이미지를 통해 보복적 태세(미국 협상)를 강조하며, 민족 담론 약화를 가속화했다.

2022년에 발행된 세 종의 북한 우표는 이전 시기와 달리 핵무력을 전면화한 공세적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선전 양식의 구조적 단절을 보여준다. 이 시기부터 북한은 핵무기를 우표에 직접 표기하고, 이를 정권의 전략적 정당성과 대외 신호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



〈그림 41〉 2022년-1



〈그림 42〉 2022년-2



〈그림 43〉 2022년-3

전체계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그림 41〉 2022년-1 우표는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이라는 문구를 통해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국가적 사건으로 선언하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대북 제재 지속에 직면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의 공식화’를 내부·외부 대상 모두에게 천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어 〈그림 42〉 2022년-2와 〈그림 43〉 2022년-3 우표에서는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와 같은 수사를 통해 미국을 직접적인 가상 적으로 설정한 대결적 메시지가 강화된다. 이들 우표에서 ICBM 발사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한 점은 특히 주목된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화성포-17형은 최고 정점고도 6,000km 이상에 도달했으며, 우표는 이 발사 성공 장면을 시각적으로 재현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전략적 억지력’을 선전의 중심으로 끌어올린다. 이전 시기 우표가 민족·통일·지도자 상징 등 내부 통합형 메시지에 집중했다면, 2022년 우표는 기술적 성능 데이터까지 삽입하여 ‘대미 억지력’과 ‘상호 보복 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처럼 2022년 우표는 하노이 회담 결렬, 미국의 대북 제재 지속,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일련의 외생적 압박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그림 44〉 2023년



〈그림 45〉 2024년

대응을 시각적으로 정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민족·통일 기표가 삭제된 자리에 핵전략·군사력·대미 대결 구도가 들어서며, 우표가 국가주의·군사주의로의 이념 전환을 제도화하는 핵심 매체로 재구성된다. 결국 2022년 우표는 북한 선전체계가 ‘민족·통일’ 중심 구조에서 ‘국가·핵무력’ 중심 구조로 이동했음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2023년 북한 우표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핵무기 투발수단의 구체적 시각화와 함께, 기존의 민족주의·통일 메시지를 완전히 삭제한 점이다. 〈그림 44〉 2023년 우표는 “전술핵공격잠수함 제841호 <김군옥>영웅함”,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 성대히 진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신형 전술핵공격잠수함(SSBN)의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배치했다. 잠수함 명칭의 ‘김군옥’은 6·25 전쟁 당시 미 해군 불티모어급 중순양함을 격침한 해군 영웅을 기리는 것으로, 과거의 ‘반미 승리 신화’를 현재의 핵전략 서사와 연결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는 우표가 단순한 군사 과시가 아니라, 미국을 상정한 전략적 메시지를 역사적 내러티브와 결합해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적 구성은 2020~2023년 동안 북한이 ICBM·SLBM·전

술핵 등 핵무력 3대 수단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며, 군사 중심의 국가 정체성과 대미 억지 전략을 우표 선전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2023년 이후 우표에서는 ‘민족’, ‘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기존의 이념적 기표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기체계·전략무기 개발 성과·전쟁 승리 역사 등의 조합이 새로운 선전의 중심축으로 재편된다. 이는 민족 담론의 약화가 단순한 이념 조정이 아니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의 대결 구도 심화, 확장억제 강화, 연합훈련 재개라는 외생적 압박 속에서 북한이 국가·군사 중심 서사를 공식 이념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이 흐름은 〈그림 45〉 2024년 우표에서 더욱 첨예하게 발전한다.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이라는 문구와 함께 ICBM 발사 장면을 직접적으로 시각화한 2024년 우표는,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자력갱생’ 노선을 전면화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는 우표가 단순한 기술 홍보용 매체가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대응하여 북한이 선택한 ‘핵 중심 생존 전략’을 주민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동시에 표출하는 정치·전략적 도구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북한 우표라는 비전통적이지만 고밀도의 상징 정치 자료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기를 관통하는 민족·국가 담론의 장기적 변모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기존 연구가 문헌·담론 분석에 주로 의존하여 북한의 ‘두 국가’ 담론을 정치적 수사나 정책 결정

의 결과로 해석한 데 비해, 분석을 통해 그 변화가 우표라는 시각적 매체 속에 선행적으로 축적되고 조기 표출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라스웰의 선전 이론이 제시한 네 가지 구성요소, 즉 정치적 목적성, 상징체계, 반복성, 대상 지향성이 북한 우표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각 시기별로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는지를 3축 분석 틀 “담론 방향성, 상징체계 변화, 외생적 요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우표는 정권이 강조하는 정체성·이념·통치 사상을 가장 단순화된 기호로 제시하는 채널이며, 정책 문건보다 선행하여 담론의 방향성을 표출하는 ‘담론 조기지표(early indicator)’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표 변화를 통해 바라본 각 시대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보다 정교하게 구분된다. 첫째, 김일성 시기 우표는 ‘하나의 조국·하나의 민족’을 절대적 지향점으로 제시하며, 통일은 곧 체제 정통성의 근거이자 민족적 운명의 핵심으로 묘사되었다. 국가 상징보다 민족 상징이 우위에 있었고, 조국 통일은 사회주의 건설과 병렬적으로 배치되었다. 둘째, 김정일 시기 우표는 ‘민족’이라는 기표 자체는 유지하지만, 통일은 더 이상 절대적 목표라기보다 ‘국가적 자강과 군사력 강화가 전제되는 과제’로 재구성된다. 핵·국방 관련 도상은 점진적으로 등장하며, 민족 상징과 지도자 상징의 비중이 균형적으로 혼합되기 시작한다. 셋째, 김정은 시기 특히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우표의 상징 체계는 민족·통일·대단결을 전면에서 제거하고 핵무력·대륙간탄도미사일·국가주의 기호로 급속하게 대체되었다. 조선우표사 내 ‘조국통일’ 카테고리가 삭제되고 ‘전략·무력’ 관련 시리즈가 반복 발행되었으며, “민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의 전환이 선명하게 시각화된다.

이러한 변화가 단지 남·북관계의 악화나 내부 정당성 위기의 부산

물이 아니라, 대미 외교의 구조적 실패와 국제정치적 압박이라는 외생적 요인이 담론 전환을 직접적으로 추동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갖는 이론적 기여를 제공한다. 즉, ‘두 국가’ 담론은 단지 대남관계 재정의가 아니라, 대미 관계에서의 좌절이 내부 정치 서사에 내면화된 결과이며, 우표는 이러한 내면화 과정을 민족 담론의 폐기 형태로 조기 표출한 것이다. 또한 기존 적대적 두 국가론 연구와 대비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이 북한의 두 국가론을 남·북관계 변화만으로 설명하거나, 민족 개념의 전략적 재구성을 내부적 필요로만 해석했던 데 비해, 본 연구는 우표 변화를 통해 담론·상징·국제정치 구조가 서로 맞물리는 삼중적 전환 과정을 제시하였다. 즉, 우표의 변화는 단순한 국가주의 강화가 아니라, 민족 개념의 전략적 해체 → 국가 중심 정체성 구축 → 핵전력의 국가 정체성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재구조화 작업의 일부였다.

특히 ‘통일 언어의 소멸’과 ‘존립 언어의 등장’이라는 패턴은 북한이 한반도를 더 이상 민족 공동체로 상정하지 않고, 실질적 적대 국가로 재구성하려는 장기 전략임을 시사한다. 민족 상징의 후퇴는 체제 결속의 약화가 아니라, 미국 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을 국가 위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며, 이는 향후 북한 대외정책·대남정책에도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표를 조기 지표로 보는 접근은 북한 연구 방법론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기존 북한 연구가 담론·문건·연설 중심 접근에 치중했기 때문에, 정권의 미세한 이념 변화나 상징체계 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우표는 발행 주기·도상·문구·카테고리 변화가 신속하게 이념 조정의 방향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변화가 문건보다 먼저 나타나는 영역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북한 정치 변동 연

구에서 시각 매체 기반 분석이 유의미한 예측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정치학적으로도 중요한 기여를 제공한다. 민족주의 연
구에서는 흔히 민족을 ‘고정된 정체성’으로 바라보거나, 국가주의의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례는 민족 담
론이 언제나 정권 전략에 따라 해체·대체·재배열될 수 있는 유동적
자원임을 보여준다. 이 점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재구조화되는지를 설명하는 비교정치 이론에도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
다. 향후 우표와 더불어 화폐, 포스터, 기념메달, 도시 조형물, 영화,
기념행사 등 다른 시각 매체와의 비교 분석을 확장함으로써, 북한의
국가 정체성 구축 과정이 매체 간 어떻게 중층적으로 표현되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동독·소련·중국의 선전 매체 변화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족-국가 담론이 재구성되는 보편
적·특수적 메커니즘을 동시에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
구는 우표라는 작은 매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세계관·전략·생존 논리
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되고 조기 표출되는지를 입증하였다. 우표
는 북한의 담론 변화, 특히 ‘민족에서 국가로’의 이념적 전환을 기록한
정치적 텍스트이자, ‘적대적 두 국가 체제’로의 이동을 설명하는 중요
한 관찰 창구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북한의 미래 정책 방향을 이해하
는 데 필수적인 이론적·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

■ 투고: 2025.11.11. / 수정: 2025.12.02. / 채택: 2025.12.03.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로동신문』, 2021년 1월 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로동신문』, 2023년 12월 31일.

2) 기타 자료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조선중앙통신, 2021년 1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우표사,” <http://www.korstamp.com.kp/>(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조선중앙통신, 2023년 9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전원회의,” 조선중앙통신, 2024년 1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 조선중앙통신, 2024년 10월 24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황수환 외,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서울: 통일연구원, 2024), 28쪽.

2) 논문

권숙도,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통해 본 북한 통일정책의 전환,” 『대한정치학회보』, 제32권 4호(2024), 127~150쪽.

- 김보민,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2021), 139~177쪽.
- 손선희,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선언과 우리의 대응: 동독의 ‘두 민족 두 국가론’과 비교,” 『외교』, 제152호(2025), 172~185쪽.
- 이봉기, “동독의 2민족론과 사회주의 독일민족 담론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과제,” 『현대북한연구』, 제28권 1호(2025), 127~175쪽.
- 이혜숙, “우표로 본 한국사회와 상징정치: 해방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20권(2018), 75~119쪽.
- 정다현, “북미·남북관계 북한우표의 함의와 상징주의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24권 3호(2021), 109~155쪽.
- , “북한의 아지프로 우표정책과 지도자 상징조작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 정대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통일방안,” 『통일과 평화』, 제16집 2호(2024), 127~167쪽.
- 표윤신·허재영, “저항 민족주의의 계승과 발전: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문화와 정치』, 제9권 4호(2022), 37~62쪽.

3) 기타 자료

- “북한, 평양서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철거”(2024.1.24.),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web/unikorea/bbs/bbs_0000000000000006/57544?cp=63&pageSize=15&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baNotice=false&baCommSelec=false&baOpenDay=false&baUse=true(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3. 국외 자료

1) 단행본

- Garfield, Simon, *The Error World: An Affair with Stamps*(Bosto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09).

- Hoyo, Henio, "Posting Nationalism: Postage Stamps as Carriers of Nationalist Messages," in Joan Burbick and William Glass(eds.), *Beyond Imagined Uniqueness: Nationalisms in contemporary perspectives*(Cambridg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0), pp.67~68.
- Muir, Douglas N., *Postal Reform & the Penny Black*(London: National Postal Museum, 1990).
- Schauffler, Robert Haven, *Flag Day: its history*(New York: Moffat, Yard And Company, 1912).

2) 논문

- Deans, Phil and Hugo Dobson, "Introduction: East Asian Postage Stamps as Socio-Political Artefacts,"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Vol.22, Issue.2(2005), pp.3~7.
- Lasswell, Harold D., "The Theory of Political Propagand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21, No.3(1927), pp.627~631.
- Lebed, Felix and Elia Morgulev, "Stamps Don't Lie: Sports, Military, and National Identity Postage Stamps As a Mirror of Aggressive Soviet and Russian Propaganda," *Physical Culture and Sport: Studies and Research*, Vol.105, Issue.1(2024), pp.52~64.
- Prieto-Andrés, Antonio et al., "The propaganda of Italian colonial imperialism in Africa through postage stamps (1903-1941)," *Nations and Nationalism*, Vol.29, Issue.4(2023), pp.1401~1421.
- Sommer, Mark, "Pyongyang, Propaganda, and Postage Stamps," *North Korean Review*, Vol.13, No.2(2017), pp.74~83.

3) 신문

- Hall, David, "Postage propaganda: The pro-Soviet stamps North Korea wants the world to forget," *NK News*, August 15, 2025, <https://www.nknews.org/2025/08/postage-propaganda-the-pro-soviet-stamps->

north-korea-wants-the-world-to-for get/(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4) 기타 자료

Hall, David, "North Korean National Identity, Expressed Through Postage Stamps, 1948-1970," *The Journal of Korean Philately*(Korea Stamp Society, 2018).

"Stamp World," <https://www.stampworld.com/ko/stamps/North-Korea/>(검색일: 2025년 11월 11일).

Analyzing the Discursive Shift from “Nation” to “State” through North Korean Postage Stamps

Lee, Yang Woo(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visual-symbolic transformation in North Korean postage stamps, identifying the shift in identity discourse from a nation-centered to a state-centered framework. Departing from existing research that largely focuses on speeches and textual documents, this study explores how stamps — an everyday and repeatedly circulated propaganda medium — encode mechanisms of memory politics, ideological reconstruction, and state identity formation in North Korea. The analytical framework is structured around a three-axis model — discursive direction, symbolic system, and exogenous factors — derived from Lasswell’s four components of propaganda: political purpose, symbolic structure, repetition, and audience orientation.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stamps issued under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shows that Kim Il-sung’s period

visualized a unification-oriented nationalist narrative centered on “one nation, one fatherland,” while Kim Jong-il emphasized self-reliance, peaceful unification, and great national unity to maintain and expand ethnic identity. Under Kim Jong-un, particularly after the breakdown of the 2019 Hanoi summit, symbols of “nation” and “unification” rapidly diminished, replaced by state- and security-oriented narratives such as nuclear force, strategic weaponry, and “state-first” ideology. These changes visually indicate North Korea’s reframing of inter-Korean relations from a shared ethnic community to two mutually hostile state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stamps function as an early indicator of discursive and identity shifts, often preceding changes in policy documents. By analyzing stamps as a visual medium, this study reinterprets the weakening of national discourse and the rise of state-centered narratives within broader structural and strategic contexts, offering a new analytical lens for understanding North Korean propaganda and identity politics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North Korean postage stamps, symbolic politics, national discourse, two-state discourse, DPRK-US Relations